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 2000년 10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제주 KAL 호텔(2층)

- 주최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방송인클럽
- 후원 : 제 주 도

세 미 나 일 정

■ 등 록 : 13:30~14:00

■ 개 회 식 : 14:00~14:20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이 문 교 / 제주발전연구원장
- 인사말씀 : 고 광 택 / 제주방송인크럽회장
- 축 사 : 우 근 민 / 제주도지사

■ 기 조 강 연 : 14:20~15:00

- 주 제 : 남·북화해시대의 지도자 역할
- 발 표 : 한 완 상 / 상지대학교 총장

■ 제1주제 : 제주 '평화의 섬' 지정 필요성 (15:10~16:10)

- 사 회 : 신 행 철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 표 : 김 세 택 /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 토 론 : 고 호 성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양 길 현 /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김 부 일 / KBS제주방송총국 취재부장

■ 제2주제 :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전략 (16:20~17:20)

- 사 회 : 이 용 길 / 제주산업정보대학 자치행정과 교수
- 발 표 : 김 부 찬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 토 론 : 강 근 형 /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방 청 록 / 탐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윤 덕 민 /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장

■ 제3주제 :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국제교류·협력 (17:30~18:30)

- 사 회 : 고 남 욱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 표 : 안 영 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토 론 : 고 성 준 /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박 상 수 / 제주관광대학 기획관리실장
양 덕 순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만찬 : 18:30~20:00

세계평화에 기여할 제주 '평화의 섬'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주제발표를 흔쾌히 맡아 주신 김세택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님, 김부찬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님,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사회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에는 오래 전부터 '평화의 섬' 지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제주의 전통정신에 평화정신이 함축되어 있음은 물론이지만 세계 정상들의 제주회담 이후 실현된 냉전시대의 종식과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남북관계 당국자간의 빈번한 제주에서의 회담 등은 제주가 '평화의 섬'임을 더욱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방송인크럽은 현재의 성숙된 '평화의 섬' 조성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정책적 실현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식견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중의 하나는 국제 교류의 주체나 경쟁단위가 국가가 아니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간 협력·경쟁의 시대에 제주 '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가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서 역사성

과 국제성을 다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평화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간 도민과 도정의 노력으로 1999년에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성문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도민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조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고, 이를 기초로 제주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 질서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제주도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0월 12일

제주발전연구원장李文敎

제주 '평화의 섬' 실천적 대안 모색

오늘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방송인클럽이 공동 주최하는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과 제주방송인클럽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주방송인클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가정책과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뉴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학술적 논의를 통해서 이론적 틀을 구축하는 일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화해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남북장관급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평화의 섬'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것을 계기로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갖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을 위해 한장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나마 기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돼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분야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학술세미나 결과는 지금까지 공허하게만 들리던 '평화의 섬' 구상에 구체적인 이론으로 뒷받침이 되고 실천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제주방송인클럽의 학술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근민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나와주신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0월 12일

제주방송인클럽회장 高 廣 澤

남북화해시대 상징적 역할

21세기 남북화해의 시대에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방송인크럽이 도내·외 석학과 전문가 그리고 도민 여러분을 모시고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1세기 남북관계는 「국민의 정부」의 지속적인 햇볕정책으로 인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등 불과 몇 달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민족사가 다시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가치,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평화 애호적인 성향으로 인해 국방장관회담, 남북장관급 회담, 교차관광 등의 주무대가 되면서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새로운 세계 평화 질서 구축에 필요한 '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제주에서는 각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평화의 섬'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평화의 섬'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남북화해 과정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여건은 이미 성숙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개최되는 본 세미나의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단초를 제공하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세미나에서 국제교류와 남북화해의 시대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미래지향적, 실천적 방안이 많이 강구되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이문교 제주발전연구원장님과 고향택 제주방송인클럽회장님, 그리고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 세미나가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0월 12일

제 주 도 지 사 禹 瑾 敏

주 제 발 표

□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강연 : 남·북화해시대의 지도자 역할

韓完相 / 상지대학교 총장

제1주제 : 제주 '평화의 섬' 지정 필요성

金世澤 /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제2주제 :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전략

金富燦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제3주제 :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국제교류·협력

安英勳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남·북화해시대의 지도자의 역할

韓 完 相

(상지대학교 총장, 전 통일부총리)

한반도에 깊이 뿌리내렸던 냉전체제는 6·15선언을 계기로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8·15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통해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로 반세기를 버티어 온 냉전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잠시 동안이나마 실감케 하였다. 이 감동적 만남과 뜨거운 눈물은 한낱 감상적인 사건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엄청난 역사의 변화를 몰고 올 엄연한 현실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한반도 냉전구조는 정말 해체될 것인가?

이 물음은 곧 통일시대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연관된다. 먼저 지난 반세기동안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이 땅의 지도층이 대체로 냉전체제의 재생산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왔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해방된 뒤 3년만에 한반도 남북에는 각기 독립정부가 수립되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자, 한반도에 주둔했던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하여 미국이 잠정적으로 그었던 38선이 1948년 남북 각기 독립정부가 수립되면서 일종의 국경으로 고착되고 말았다. 강대국이 그어 놓았던 잠정선이 민족내화되면서 남북의 두 정부는 본격적인 냉전대결 상황으로 돌입하였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에 터진 한국전쟁으로 남북은 치열한 열전을 겪게 되었다. 그후 3년, 남과 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그전보다 더욱 치열한 냉전대결 상황에 돌입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남과 북 가릴것 없이 권력주체는 냉전가치를 국시적 가치로 떠받들면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 그만큼 민족의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멀어지게 되었다.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질수록 통일이라는 담론은 권력주체에 의해 이데올로기로 작동되기 시작했다. 최근 이같은 사실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쪽의 언론사 사장들 앞에 증언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은 참으로 정직하고 용기있는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 없다.

남쪽의 지난날을 살펴보자.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도 오로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냉전체제의 강화와 통일의 이데올로기적 오용의 심화라는 사실이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 주체는 원시적인 냉전정치를 선호했다. 북진통일정책이나 멸공정책을 앞세워 한반도 냉전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였다. 특히 집권당내 친일세력은 한편 반공을 앞세워 지난날의 친일행적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세력에 대한 매카시즘적 통제를 통해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였다. 죽산 조봉암의 제거가 그 같은 냉전통제의 한 본보기라 하겠다.

박정희 정권은 이같은 냉전통제식 정치를 확대 재생산했었다. 그 자신의 과거 행적을 은폐하기 위해서도 더욱 반공을 앞세우기도 했다. 바로 이 군사통치 시기에 반공은 국시로 신성화되었다. 이 가치에 대한 의심과 도전은 즉각 국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철저하게 처벌되었다. 박정권은 반공과 함께 경제성장을 또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웠다. 先成長 後分配의 경제정책에 도전하는 세력을 역시 냉전식 통제를 통해 억제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하면서도 그것을 냉전적 안보의 이름으로 변호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간 자유권적 기본권을 부르짖었던 지식인과 학생들을 탄압했을 때나, 생존권적 기본권을 주장했던 노동자를 탄압했을 때도 정부는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냉전적 통제를 무자비하게 자행하였다. 즉 정부 비판자들은 노동자와 학생을 가리지 않는다. 용공주의자로 낙인찍어 형사처벌하려 했던 것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서도 이같은 냉전통치의 유산은 지속되었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폭도로 또는 용공세력으로 몰아 그들의 기본권을 박탈하였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의 냉전통제는 극명하게 드러났었다. 노태우 정권에 와서 다소 이같은 경향은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남북기본 합의서> 같은 중요한 역사적 문건이 나오게 된다. 언뜻 보면 냉전정치가 약화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문서가 한번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냉전정치는 더욱 교묘하게 지속되었다. 냉전정치의 레토릭은 세련된 듯해 보이지만, 냉전정치의 현실은 그전의 정

권들과 다를 바 없이 냉혹했다. 말로는 북한을 동반자로 규정했으나, 행동으로는 여전히 초전박살낼 주적으로 간주하였다. 정치언어와 정치현실은 각기 따로따로 현란하게 춤추게 되어 오히려 인식의 혼란이 올 지경이었다. 이같은 혼란을 노태우정권은 진지하게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상황의 이중성을 빌미로 오히려 그 애매모호함을 편리하게 활용하였다. 즉 대북강경정책을 쓸 때는 주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했고, 대북포용정책을 선호하는 척 했을 때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같은 상황의 이중성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처음부터 어렵게 하였다. 냉탕·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그러기에 노태우 정권은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역사적 문건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휴지 조각처럼 버려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문민정부가 들어와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장엄한 탈냉전선언 같은 대통령 취임사의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문민정부 스스로에 의해 무시되었다. 그것은 집권세력 안에 냉전수구세력이 그전의 정권들과 다를 바 없이 강고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하에서 대북정책의 비일관성은 오히려 더욱 두드러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뜻에서 문민정부는 노태우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이승만 정권에서 문민정권에 이르기까지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은 냉전정치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었다. 이런 흐름은 기업계,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 안에서도 강하게 흘러내렸다. 냉전체제는 여러 차원에서 강화된 셈이다. 국가부분이나 사회부분 모두에 냉전체제는 널리 확산되었고 깊이 심화되었다. 그것이 하나의 지배문화,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대체로 냉전통제를 담당했던 정부기구의 힘은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더욱 막강해졌다. 정보부, 검찰, 경찰 등 공안기구는 냉전안보논리에 따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기구들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정치적 후진국의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다. 냉전기구의 강화와 함께 냉전규범

도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은 공포를 자아내리만큼 신성한 법처럼 여겨졌고 법 중의 법처럼 군림했으나,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전락되기도 했다.

이같은 냉전규범의 제도화가 강화되고 냉전통제기구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냉전가치(또는 냉전의식)는 더욱 철저하게 내면화 되었다. 여기서 냉전 근본주의(fundamentalism)라는 닫힌 가치가 심화되고 확산된다. 교육을 통해 그것은 다음 세대로 전수되었다. 무릇 모든 근본주의 가치(또는 의식)는 상대방을 악마화한다. 상대방을 주적으로 규정하여 초전박살내려고 한다. 그러나 자기는 옳다고 확신한다. 그러기에 근본주의는 독선과 억압을 낳는다. 자기와 상대방 사이에 위치하는 모든 주장과 입장은 불순하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차이는 곧 차별로 이어지고, 비관용이 덕목으로 칭송되기까지 한다.

이같은 냉전근본주의 가치는 자연히 다음과 같은 가치를 선호하게 한다. 상대방의 악마성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불변신화를 선호한다. 이를테면 북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악마라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전방위외교를 펼치거나, 칠천지 원수라고 주장했던 미국과 관계개선하려 한다거나, 헌법을 고쳐 자본주의 경영요소를 도입한다거나, 6·15선언을 남쪽과 함께 합의했다 해도, 북의 본질은 영원불변이라고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불변신화다.

불변신화의 신념은 자연히 남북관계에 있어 철저한 상호주의 전술을 선호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하는 등가적 보복이든, 아니면 준것만큼 철저히 받아내는 등가적 교환이든간에 상호주의를 선호한다. 또한 등가적인 것과 함께 동시적 상호주의를 선호한다. 이같은 선호는 상대방에 대한 냉전적 불신에 기초한다. 불변신화와 상호주의가 상승작용을 하게 되면 남북 관계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지난 날 이땅의 정치지도자들이 술선하여 이같은 관계악화에 일관성 있게 공헌해 온 셈이다. 지금도 그러하다.

이제 상황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20세기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면서, 냉전과 라다임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1989 베를린장벽의 와해로 냉전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한반도를 제외한 세계적 수준에서는 그러하

다. 새 천년은 새로운 발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두에게 요청한다. 이제는 좌·우의 개념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문제를 풀 수도 없게 되었다. 정보화 흐름은 냉전체제의 요구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개인의 창의력, 조직의 투명성, 관용의 가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상황의 변화와 함께 남과 북에서도 지난 몇 년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남한에서는 지난날 군사통치시대의 억압적 통제는 사라지고 있다. 노동 삼권의 박탈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광고탄압 같은 언론통제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탄압 역시 이제는 <어제의 일>로 회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요즘은 오히려 공권력의 약화가 공론화 될 지경에 이르렀다. 북은 북대로 크게 변화했다. 세계적 탈냉전 흐름 속에서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었고, 경제적 궁핍 역시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열악화 속에서도 북은 헌법을 개정하였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오늘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악력은 확고해지면서 최근 국제적 고립에서 전방위 외교노선으로 크게 선회하고 있고, 마침내 남에 대한 냉전적 불신에서 벗어나 6·15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6월에서 9월 사이 남북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행사들은 한결같이 냉전 빙벽의 기적적 해빙을 시사하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바로 이같은 전환은 결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새 천년 세계사의 흐름과 조응하고, 남북 최고지도자들의 새로운 결단에 부응하며, 특별히 열린 민족주의 정신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열망하는 민족 구성원의 열망에 부응하기에 이 전환의 흐름은 거역하기 어려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역사의 카이로스 시점에서 남북의 정치지도자, 특히 남쪽의 정치지도자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할까?

먼저 남북간의 힘의 비대칭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주목하여 불변신화와 그것에 연관된 냉전적 상호주의 가치를 극복해 내야 한다. 남북간의 경제적 힘의 격차는 심각하다. 남쪽이 북쪽에 견주어 20배 이상 강하다. 경제력이 군사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면, 남쪽 지도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북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냉전적 정치인일수록 6·25전쟁 때의 경험에 함몰되어 북한을 걱정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두려워하고 증오하면서 북한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북한의 호전성을 비현실적으로 과장하기 때문이다. 6·25 때는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훨씬 우월하였다. 허나 지금의 형편은 전혀 다르다.

그렇다고 남북간 힘을 경제력으로만 볼 수 없다. 사상면에서나 내부 단결면에서는 북이 더 강한 것 같다. 군사력으로는 남북간에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만큼 북한은 강하다. 북은 남을 일시에 불바다로 만들만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북의 군사력과 경제력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선택이다. 경제력은 약하지만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강할 때,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북한당국은 자연히 군사력을 통해 그 위기를 타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군사력 의존에 의한 위기 타개책을 선호하게 된다. 비록 강성대국의 개념이 군사력, 사상력,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강성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98년 8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강성대국을 내세운 것을 주목한다면, 강성대국의 힘은 일차적으로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신문은 1998년 3월 9일자로 “망치와 낮은 총대를 만들어 내지만, 총대의 사명과 위력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것은 총대의 위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명백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북한을 억지할 만한 군사력도 지니고 있는 남쪽의 정치지도자들은 북의 이같은 경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려 한다면 말이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간의 불균형을 경제력 제고를 통해 해소시켜주는 큰 틀의 정책을 뜻한다. 이것은 군사모험주의를 방지할 뿐 아니라, 한반도 냉전구조를 생산적으로 해체하는데도 효과적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남북이 함께 다뤄가야 할 것이다.

힘의 비대칭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합리적으로 인식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 새로운 정책은 물론 탈냉전정책이다. 탈냉전정책은 적어도 세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그것은 국제관계의 차원이다. 정치지도자는 냉전시대 한반도를 둘러싸고 편성되었던 냉전적 국제관계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른바 교차승인을 완성시켜야 한다. 한때 북한은 그것을 반대했고, 노태우 정권은 그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정권은 말로는 교차승인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통해 평양을 압박하는 냉전적 북방정책에 매달림으로써, 평양으로 하여금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절박한 현안문제로 인식하도록 동기부여한 것 같다. 여하튼 이제는 남한 정치지도자들은 교차승인을 완결짓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을 통하지 않고도 워싱턴과 도쿄가 평양에 가도 좋다는 대국적 자세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SEM이나 ARF가 그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둘째, 남북간의 냉전불신을 제거하는 일에 정치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신 해소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불신을 자극하는 말을 삼가하는 일은 서로 절대 필요하다. 대체로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면서 융통성 있게 제공하는 일이 효과적이다. 그런 뜻에서 경제협력이 유효하다.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 난을 극복하는 일에 先供後得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열악한 SOC 구축에도 민족상생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셋째, 남북 각 체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냉전제도와 냉전가치를 극복하는 일에 정치인은 앞서야 한다. 이점에 관련하여 최근 남쪽 언론사 사장들 앞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 말은 크게 고무적이다. 노동당규약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남쪽의 국가보안법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김위원장의 견해는 경청하고 참고해야 한다. 먼저 상호주의 틀에서 벗어나 상대가 하든 말든, 먼저 우리 쪽에서부터 제도화된 냉전구조를 탈제도화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하는 냉전적 소극주의나 패배주의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과감하게 냉전적 법규는 개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부터 상대방을 악마

화시키는 냉전교육을 이제 청산해야 한다. 그간 깊숙이 내면화되어버린 냉전가치를 탈학습(脫學習)시키는 일에도 정치지도자들은 과감히 나서야 한다. 냉전법규의 탈제도화(脫制度化)와 냉전가치의 탈학습화는 게을리할 수 없는 절박한 이 시점의 정치적 과제임을 정치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思考의 폭을 남한과 북한의 차원에서 한반도 전체의 차원으로 넓혀야 한다. 마치 남한 방송에서 일기예보할 때 이제는 평양과 함흥의 기후도 자연스럽게 예보해 주듯, 어떤 특정 정책이 한반도 민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를 심사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이 힘을 합쳐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민족 전체가 먼저 참된 민족해방과 민족광복의 감동을 체험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층이 솔선하여 대결과 불신을 일삼았던 지난날의 남북간 냉전대결을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여기서 6·15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새삼 음미해 보아야 한다. 6·15선언이 <미완의 해방과 광복으로서의 8·15>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사고의 폭과 차원이 민족 전체의 차원으로 크고 넓어지게 된다. 좀 더 부연해 보자.

우리는 여태껏 해방다운 해방, 광복다운 광복을 경험하지 못했다. 8·15는 해방절이긴 하나, 1945년 8월 15일의 해방 감격은 잠시였고, 곧 조국의 분단이 굳어지면서 한반도 전역에는 냉전체제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분단의 시발은 강대국에 의한 것이었으나, 분단고착은 정치지도자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이 냉전체제로 양분되면서, 민족간 불신, 증오, 대결은 심화되었다. 6·25전쟁이란 열전은 냉전의 악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민족의 저력과 자원(인적, 물적)을 같은 민족을 초전박살 내리는 일에 낭비해왔다. 이같은 어리석은 냉전대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마다 맞는 8·15 해방절은 참된 민족해방의 기념일이 될 수 없었다. 광복이 아니라 오히려 흑암이 우리겨레를 괴롭혀온 세월을 회상하게 되었다. 전범국 일본은 통일된 채 오늘의 경제대국에 이르렀지만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당한 우리 민족은 2차대전이 끝난 뒤에도 분단으로 서로 미워하고 대결해 왔으니, 지난 반세기 동안 해마다 맞는 8·15는 통한의 아픔을 체험하는 계기

였다. 게다가, 종전 뒤 미국이 세계 냉전체제의 틀 속에서 패전국 일본을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조국해방을 위해 싸웠던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무시당하였으며, 남한의 중요성을 냉전 질서 안에서 일본 방위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했었다. 이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다. 더욱 더 서글픈 일은 이같은 냉전 대결을 즐기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지난 반세기동안 나라를 지배·통제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같은 비극을 종식시켜 참다운 해방의 감동을 온 민족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냉전체제를 철저히 극복해내는 일이 시작되어야 함을 뜻한다. 바로 이런 뜻에서 6·15는 미완의 8·15 정신을 활짝 꽃피우게 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먼저 6·15를 6·15답게 작동시켜 온 민족의 참된 해방과 광복의 감동을 민족 구성원들에게 안겨주어야 하는가! 바로 이땅의 정치지도자들 자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낡은 냉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촉구한다.

제주 '평화의 섬' 지정 필요성

金世澤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 목 차 >

- I. 서 언
- II. 왜 '세계 평화의 섬'인가
- III.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의 의의
- IV. '평화의 섬' 지정과 제주인의 역할
- V. 결 론

I. 서 언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론이 '90년대에 들어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는데 '99년 12월에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은 제52조에서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道)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주 평화의 섬' 탄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었다. 더 나아가 동법은 같은 조항에서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행해야 한다고 적극 지지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제주도로서는 한 많던 20세기를 보내면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법률로서

‘평화의 섬’ 지정의 기회를 얻은 것은 단순히 선언적 의의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법의 정신이 물고을 창설적 내지는 실질적 효과가 실로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축적되기 시작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91년 4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간의 제주 ‘평화 화담’이라 할 수 있다. 그 후로 이어진 ‘95년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96년의 클린턴 미국 대통령, ‘99년 오부찌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의 제주 방문은 제주를 주변 四강의 ‘평화를 담판하는 섬’으로 온 세계에 부각시켰고, 결국 위에 언급한 ‘특별법’의 제주의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은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을 현실적으로 수용한 입법(立法)이었다고 사료된다.

아직 법적으로 정식 지정하기에 이른 것은 아니나 제주의 ‘평화의 섬’이라는 일반적 인식 내지 각인은 최근 북한 지도급 인사들의 제주도 방문을 촉발시켰다고 보여지며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2차 남북한정상회담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제주 방문은 제주의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위상을 국제적으로 더욱 제고시킬 것임에 틀림 없으리라 본다.

II. 왜 ‘세계 평화의 섬’인가?

그러면 ‘세계 평화의 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단순히 평화의 섬이라 하지 않고 ‘세계’ 평화의 섬이라 하였는가?. 우선 평화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평화라는 말은 태초에서부터 인류가 갈구하는 원초적 희망 상태이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갈구하는 평화 상태의 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화의 개념은 이렇다 저렇다 획일적일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평화의 섬’의 경우에도 평화를 어떻게 느끼고 풀이하느냐에 따라 ‘세

계 평화의 섬'에 담겨질 내용이나 메시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평화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소극적 입장에서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전쟁이란 국가간에 일어나는 것인데 일단 야기된 전쟁은 항복하던지 제3국의 중재로 평화조약(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이 종료되면서 평화가 성립된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무슨 형태로든 종료되거나 없어지면 됐지 평화의 내용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 즉 패전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재발, 말하자면 평화의 파괴가 기다린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라는 사정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전쟁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소극적 생각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평화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78년 33차 유엔총회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평화의 적극적 개념에 힘을 실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견해는 전쟁이 없다는 것만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폐허로부터 유럽의 부흥을 가능케 한 미국의 마셜플랜은 적극적 평화관에 입각한 정책 실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서 제창한 네 개의 자유(the four freedom), 즉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신앙의 자유(freedom of worship),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는 전쟁이 끝난 다음 그가 그린 적극적 평화관의 기본 설계도라고 평가된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곧 평화라는 인식은 아무래도 형식 논리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은 국제법적으로는 전쟁이 종결되어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온 것으로 보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도사리고 있었고, 제주에서는 4·3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이 없어진 상태만에 만족하고 그 다음 단계를 대비 못 하는 소극적 평화란 허구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전쟁 부재의 단계를 넘어 이의 재발을 막는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욕구,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구축하여 나가는 데 있음을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다고 본다.

Ⅲ.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의 의의

위에서 평화의 뜻을 간단히 음미하여 보았거니와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다는 뜻은 무언인가?

국가(중앙정부)가 '세계 평화의 섬'이라고 그것도 법률로 지정하거나 선언한 예는 우리나라는 물론 여타 국가에서도 그 예가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체가 관광정책상 톡스 해당 지역의 평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평화지역 또는 평화마을 내지는 평화시라고 선언하는 예는 있을 수 있어도 국가, 즉 중앙정부가 국내 특정지역을 법률로써 평화지역, 즉 평화의 섬이라고 지정하는 예는 없다고 본다. 국제적으로는 교전 당사국이 합의 후 지정,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국제법상의 조치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이고, 국내법으로 '평화지역'임을 스스로 규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본다.

그러면 어떤 사연으로 해서 제주가 법적으로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탄생하게 되었는가?

우선 첫째로는 '제주섬'이 갖는 지난날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본다. 제주는

탁라, 탐라, 영주, 제주 등 이름만큼이나 곡절 많은 역정을 겪어 온 우리나라에 서는 특유한 역사를 지닌 지역이다. 태고적에는 분명 독립적 지위를 갖추다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본토의 역사에 흡수되는 과정을 밟는다. 그 과정에서 제주 는 '변방과 유배'의 지역으로 전락되고 고려조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엄연히 있음에도 기아(棄兒)가 되어 오랜동안 원(元)의 직할지로서 일찌감치 식민지의 비 운을 겪는다.

조선조에서는 중앙관리의 폭정과 가렴주구에 견디다 못한 제주인의 저항은 반란으로 표출되었고, 해방 후의 4·3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제주인의 '자기 표현'의 비극적 저항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주인은 역사에 서리어 있는 슬한 '제주적 한(濟州的恨)'이 어떤 형태로든 풀리고 4·3과 같은 비극의 재발이 없기를 원하여 왔는데 '특별법'에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제주인의 비원(悲願)에 대한 국가의 회답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는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제주로 하여금 세계 평화의 섬으로 역할하 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특별법'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 여"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는 국내적 관점에 서는 위에 언급한 역사적 배경이 고려됐겠지만 대외면에서는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지향적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어느 지역보다 유리 한 입지적 대표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으로서는 안보문제가 뭐니 뭐니 해도 제1차적 국정과제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우리 자신의 안위에 관계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직결되고 있음을 자타가 공인한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는 세계 평화의 전초기 지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으로 하여금 평화애호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널리 전파시키는 것은 당연하고도 현명한 구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의 통일을 주시하는데 한국으로서도 평화의 상징물을

세계에 제시해야 한다. 평화의 섬 지정은 동북아에 중심하고 있는 제주를 세계에 '평화재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아세아 변방지역에 우수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녀갔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소련 4강의 지도자들이 방문해서 세계 평화를 담판하였는데, 제주 평화의 섬으로서의 국제적 인지도는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본다.

셋째,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제주는 '평화의 섬' 지정으로 그 안정과 평화가 담보되어야 한다.

제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항상 전장화(戰場化) 위험성을 갖고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군의 제주상륙작전에 대비한 일본 대본영의 '결(決) 7호작전계획'이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일본은 1945년 4월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한 후 11월경 제주를 공략하리라 예상하고 7만 5천명의 병력을 집결하고 이에 대항한다는 결(決) 7호 작전 계획을 세웠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늦어져 미군의 제주도 상륙작전이 예정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제주는 초토화되고 당시 27만명의 제주인의 인명 피해는 엄청났을 것이다. 자국민 오키나와는 전투에서 57만명의 오키나와 현민 중 15만명이 사망하고 일본군 10만명이 전멸했다니, 식민지인 제주에서 더 처절한 비운을 겪었을 것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주의 평화의 섬 지정은 우선 제주지역 주변에서의 군사 전장화(戰場化)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고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IV. '평화의 섬' 지정과 제주인의 역할

세계화의 추세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었다. 제주 평화의 섬은 한국 평화의 섬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임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날의 제주

의 한(恨)과 설움을 풀려고만 해서 내려진 평화의 섬이 아니다.

세계 평화의 섬은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한 평화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어남은 바로 제주 세계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세계화의 견인역을 제주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주인은 세계가 제주에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평화의 섬’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청사진이 제시되겠지만 제주만을 생각하는 너무 ‘제주지향적’인 구상은 세계가 외면할 것이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즈음하여 제주, 제주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특별법’은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①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 ②국제 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③국제평화 및 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④기타 국제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고 더 나아가 국가는 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 방침에 따라 여러 가지 훌륭한 사업 구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지만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의 섬’ 지정은 국가가 행하게 되어 있고 관련 사업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행하는 등 ‘세계 평화의 섬’ 관련 사항 내지 사업은 국가 사업이라는 점이다.

‘평화의 섬’ 지정 주체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 특히 지정 주체와 관련, 누가 앞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가장 적합한가를 명심할 대목이라고 본다.

구체적 사업들이 ‘제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이 제주에 위임되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간접으로 제주적 요소(濟州的 要素)가 인적, 물적으로 간여될 수밖에 없으나 너무 제주적 이익만 추구하여 단기적, 타산적으로 기울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 제주의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제주가 세계로 비상하고 세계가 제주 안으로 포용되어 제주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분명한 의식을 제주인은 가져야 한다.

둘째 : '세계 평화의 섬'이라 함은 제주는 이제 제주인의 것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것이라는 상황 인식을 제주인은 가져야 한다. 제주 땅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온 세계의 것이 되어 세계인이 고향의식을 갖도록 제주인은 제주땅의 '선량한 관리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째 :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일종의 경제법에 '세계 평화의 섬'이 규정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제주도 개발은 '세계 평화의 섬'임을 명심하면서 그 전제 위에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가 어떠한 모습의 제주를 원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소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그러한 희망과 요구에 맞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제주도 개발은 '평화적 개발' 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네째 : 제주의 환경 보존은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멋진 한라산이 없고 청정한 바다가 없었던들 과연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론될 여지라도 있었겠는가. 주변 4강의 지도자들이 제주를 찾는 것을 기대나 할 수 있었는가. 제주섬은 비교적 큰 편이나 섬은 섬이다.

절해의 고도나 다름 없이 홀로 살아 남아야 한다. 명실공히 '세계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한라산과 바다를 지켜 자연과 세계인이 서로 조화롭게 이어지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 평화로운 사회는 인간간의 관계가 화평과 화목에 기초해야 한다. 구성이 다양한 사회에서 대동단결이야 있을 수 없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주민이 수긍하는 자세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세계 평화의 섬'을 출범시키는 시점에서 '평화를 위해서만'을 제주가 성숙된 시민정신을 발휘하면서 모처럼의 역사적 기회를 영구히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V. 결 론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제주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평화의 섬’ 지정의 주제, 방법, 여러 가지 사업의 시행, 정부의 지원 획득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제주인이 명실공히 적극적 평화관에 입각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평화의 섬’은 끝이 없는 영원히 이어나가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도민 모두가 훌륭한 세계인이 되고 제주의 세계화는 물론 한국의 세계화에 견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제주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전략*

金 富 燦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 목 차 >

I. 서 론

II. '평화의 섬'에 대한 접근방법

III. 제주 '평화의 섬' 모형 정립

IV.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전략

V. 결 론

I. 서 론

오늘날 각국의 도시 및 지방은 세계화·정보화로 국가의 보호 울타리를 넘어 국제적 경쟁 및 협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스스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 및 시민사회화의 경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관(NGOs)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교류·협력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이 국가를 대신하여 국제 교류의 경쟁단위이자 협력단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주가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스스로의 정체성(identity)과 국제성을 동시에 갖는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

* 본 논문은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정립과 실천방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상징적 국제 공간의 창출이 요청되고, 그 전략의 하나로써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이미지화(image-building) 하고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¹⁾ 특히, 최근의 남북 관계는 ‘국민의 정부’의 지속적인 ‘햇볕정책’으로 인해 역사적인 남북정상 및 장관급회담 개최, 남북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복원, 경제협력·지원 결정 등 전에 없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 및 남북화해의 시대에 제주를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가치, 평화스러운 천혜의 자연환경, 三無精神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지향의 전통문화, 4·3 사태로 인한 상처의 평화적 치유 필요성 등 지리·역사·문화적인 배경이 기초가 되고, 각국 정상간의 회담을 필두로 최근의 남북 국방장관 및 장관급회담, 교차관광 등의 주무대가 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서 새로운 세계평화의 모색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99년 12월에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52조는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道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국내·외적 여건은 이미 성숙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주를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제주 평화의 섬’의 모형 정립과 아울러 그 구체적인 지정 방안 및 실천 전략,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제 52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사업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제주 ‘평화의 섬’ 논의의 배경 및 관련 일지에 대해서는, 고성준, “남북 화해·협력 시대와 제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주최 권역별 세미나 발표자료집), 2000. 9. 20, pp. 28-51 참조.

II. '평화의 섬'에 대한 접근 방법

1. 평화의 개념

'평화'는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지금까지 끊임없이 추구되어 왔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추구될 인류의 영원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의 개념²⁾은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과 논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개념 정립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화에 대한 관념은 '소극적 평화관'과 '적극적 평화관'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 소극적 평화관은 전쟁의 반대가 곧 평화라는 인식 아래 전쟁 및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평화 상태로 본다. 따라서 소극적 관점에서 평화는 분쟁이나 전쟁, 갈등의 해결 및 제거를 통해 달성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평화 구축은 인류 사회가 존속되는 한 완전히 달성되기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한다. 반면에 적극적 평화관에 의하면 평화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경제적 복지 및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구현되고 보전되는 진정한 발전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 평화관은 '소극적 의미의' 평화를 창출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과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운동과 노력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정치적·군사적 의미에서 무력충돌 내지 전쟁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를 제거하고 무장을 해제하며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평화지대(zone of peace)의 개념을 곧 바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의 평화·발전 전략으로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개념을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제주 발전 전략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78년 33차 유엔 총회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의 부재된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장기적으로 제주인의 삶과 제주 발전의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인은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왔다. 평화가 의미하는 대립과 갈등이 없는 상태는 달리 표현하면 주체간의 조화로움이 실현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제주 평화의 섬'은 제주로 하여금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중앙 그리고 세계의 조화를 통한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도민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복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는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제주가 추구하는 개발 전략의 기본 방향과 상통하는 것이다.

둘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 이미지에 입각한 국제교류·협력의 거점화를 통해 제주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 시키고 세계 평화에 실천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수 있는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 및 평화실천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주는 국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지역 평화 및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조화시키고 이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 '평화의 섬'의 기초가 되는 평화의 개념은 이념적·내부적 측면에서는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이 없는 조화로움이 실현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고, 전략적·대외적 측면에서는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지역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적 존립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평화의 섬'에 대한 접근 유형³⁾

1) 정치적·체제적 접근

평화의 섬에 대한 정치적 접근은 일정 지역에 있어서 군사력 및 군사무기의

3) 김부찬, " 평화의 섬 선포를 위한 모델의 설정 및 법·제도적 검토,"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제주 평화의 섬 모델과 추진전략 모색」 워크숍 자료, 1998, pp.33~39.

제거를 통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의 억제 및 평화의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비무장 내지 비군사화를 의미하며 평화의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조건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접근의 스펙트럼은 一國의 특정 지역을 비무장·중립지대 또는 평화지대화 하는 방안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국가 체제를 永世中立國(permanently neutralized state)으로 설정하여 스스로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평화 및 안전보장체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2) 학술·문화·관광 차원의 접근

비정치적 접근의 하나로서 평화의 섬 유형은 특히 학술·문화적 차원에서 평화의 개념을 연구하고 평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아울러 평화적 환경 및 관련 문화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형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학술·문화·관광의 측면에서 보면 평화의 개념은 평화 사상·개방·질서·평안·안식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세계적 관광지가 '관광'의 이미지와 '평화'의 이미지를 통합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3) 경제적 접근

또 하나의 비정치적 접근 방안으로서 평화의 섬 구상은 경제적인 차원의 자유 및 평화, 그리고 번영이 실현되는 '평화·번영·복지의 섬' 구상으로도 추진될 수도 있다. 이는 지역이나 국제적 환경이 보여 주는 정치적·군사적 현상과는 관계 없이 경제적 번영과 복지를 향유함으로써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⁴⁾ 이러한 의미의 평화의 섬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투자·유통·산업 활동을 위한 자유관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대, 국제 물류·금융 센터, 면세 쇼핑 센터 등의 설치를 포함하는 일종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또는 국

4) 일본평화학회 편집위원회 편, 이경희 역, 「평화학 —이론과 과제—」, 문우사, 1987, p. 214 참조.

제자유도시(지역)화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다.

Ⅲ. 제주 '평화의 섬' 모형 정립

1. '평화의 섬'에 대한 개별적·분리적 접근 모형⁵⁾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방법은 우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같이 제주 '평화의 섬' 지정·선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후속 과제는 '평화의 섬'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의 섬'은 어떤 유형일까 하는 것이다.

우선 '평화의 섬'과 관련하여 모색할 수 있는 개별적·분리적 접근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화지대화 모형(중립화 또는 비무장화)

동북아 국가간의 이념적 및 군사적 대립 구도의 역학관계 속에서 제주가 군사적 대립과 전쟁 개입 가능성을 예방하고 한반도 내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본래적 의미의 '평화지대'는 최소한 '비무장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상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이러한 중립화 또는 비무장지대화가 주변국의 협력 내지 국제적 보장을 통하여 조성되고 이를 기초로 스스로의 평화를 구축하고 아울러 적극적 평화관에 입각한 평화 운동의 중심으로서 또한 지역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평화지대' 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본다.

5) 김부찬, 전개논문, pp.42~45.

그러나 이러한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의 평화지대 모형을 제주에 적용·실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제주도는 독자적인 입법권과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제주의 중립화를 통하여 중앙 정부의 관할권에 많은 제약을 가해지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 휴전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관계적 법·제도의 제약이나 한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를 '평화지대'로 지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다만, 제한적 범위에서 지역적 분쟁해결이나 평화 관련 회의 및 회담의 개최를 통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2) 경제특구화 모형(국제자유도시화)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정치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번영과 복지의 요소가 중시되는 '평화·번영·복지의 섬' 구상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 보다 획기적인 제주 발전전략이 모색되고 있으며, '제주 국제자유도시'(Cheju Free International City)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국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간의 개방 및 협력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설득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을 연결하고, 동북아경제권과 동남아경제권, 나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권간의 연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제주가 스스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 경제 협력체제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특구로서의 제주 '평화의 섬'은 자유무역항과 자유무역지대의 설치, 국제물

류기지의 조성 그리고 전도의 면세지역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특구 혹은 국제자유도시화를 통해 제주의 평화·번영·복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관점에서 설정된 제주의 '평화·번영·복지 섬'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정비 지원과 더불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비무장·중립화'를 기초로 한 '평화지대화' 모델에 비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제특구화' 모형은 평화의 본래적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경제적 자유와 번영이 반드시 긴장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평화의 섬' 구상과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모형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3) 국제교류·협력 거점 모형 (학술·문화·관광 중심지화)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학술·문화·관광의 교류 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다. 학술·문화·관광 교류차원의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도를 학술적 차원에서 '평화 사상'을 연구·전파하고 문화적 차원에서 '평화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러한 평화 관련 활동 및 자원을 관광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심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평화 관련 학술 활동 및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거나 유치하고 제주의 전통적인 '삼무정신'과 4·3 관련 역사적 유물과 문화적 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학술 활동 및 회의 참석자를 포함한 관광객으로 하여금 제주 방문을 통하여 평화정신을 고취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평화연구 센터 및 평화연수원 등을 설립하고, 4·3 관련 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고, 평화박물관과 평화공원 등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형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평화의 섬' 구상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학술·문화·관광 교류 차원의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정치적·군사적 차원이나 경제적 차원의 평

화의 섬 구상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하여 관련 법·제도적 기반 조성에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2. '평화의 섬'에 대한 통합적 접근 모형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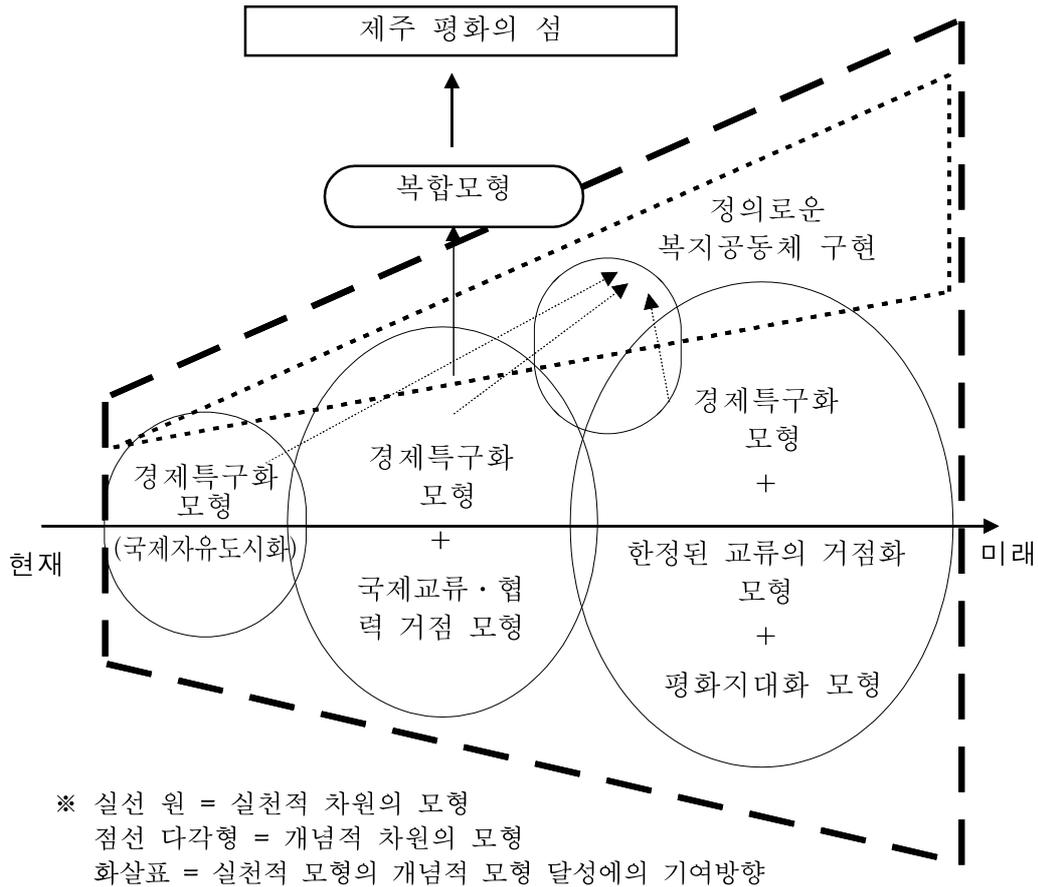
현재 제주도와 중앙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Jones Lang LaSalle 社에 의뢰한 관련 용역이 이미 완료되고 이를 기초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제주 국제자유도시' 구상은 모두 제주의 미래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비전으로 '평화의 섬'과 아울러 '즐거움 섬, 신선한 섬, 지식의 섬' 또는 '기회의 섬' 등이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의 비전과 발전 방향, 그리고 제주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의 이미지와 비전을 통합하고 발전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섬' 구상과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평화의 섬' 지정 및 추진에 있어서도 경제적 접근과 기타의 접근 모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문가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배경에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경제특구화'(국제자유도시화) 모형에서 출발하여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른 모형, 국제 교류·협력 거점화 모형과 평화지대화 모형이 복합적으로 추가되면서 단계적 또는 통합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 과정은 궁극적으로 제주를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6)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 정립과 실천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통합적인 제주 '평화의 섬' 모형을 정립하기 위하여 도내외 각 분야별 전문가 75명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통합적 제주 '평화의 섬' 모형(그림)은 이를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림 1〉 통합적 '평화의 섬' 접근 모형



V.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 전략

1. 제주 '평화의 섬' 지정의 법적 근거 및 지정 전략

1) '평화의 섬' 지정의 법적 근거

'99년 12월에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52조는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하여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평화와 및 협력기구의 유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기타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로 하여금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지정 주체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52조에 의하면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하여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원수, 즉 대통령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이의 소관 중앙부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1) 관련 중앙부처

현재 제주 ‘평화의 섬’ 지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소관 중앙부처는 건설교통부이므로 제주도의 중앙부처 파트너는 일단은 건설교통부로 보여진다. 하지만 ‘평화의 섬’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평화 연구, 국제 협력체제 구축, 분쟁 조정, 그리고 남북 대화 및 교류 사업 등은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관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외교통상부 및 통일부의 업무와도 연관되며, ‘평화의 섬’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와도 사전 협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제주 ‘평화의 섬’ 추진과 관련된 중앙부처는 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주가 되지만, 추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관련 중앙부처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법적 근거

제주가 '평화의 섬' 조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질서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제주 '평화의 섬'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주평화의섬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가칭 「제주도평화의섬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제정될 예정인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가칭) 및 그 시행령 제정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 중에 있고, 한편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평화의 섬' 지정 및 추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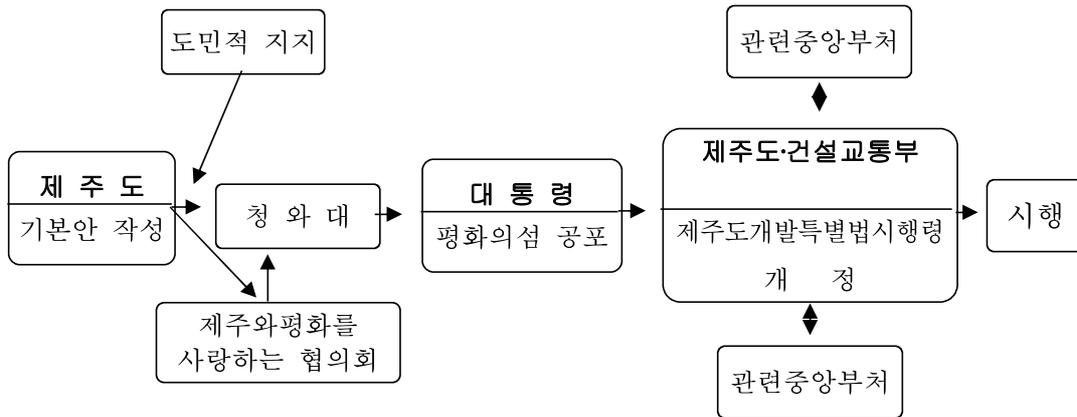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 중앙정부의 비협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제주 '평화의 섬' 근거 법률인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개정 및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통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⁷⁾

그러나, 비록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정된 '평화의 섬' 조항이 다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해 나간다면 현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평화의 섬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평화의 섬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현재 “ ... 도를 ...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 ...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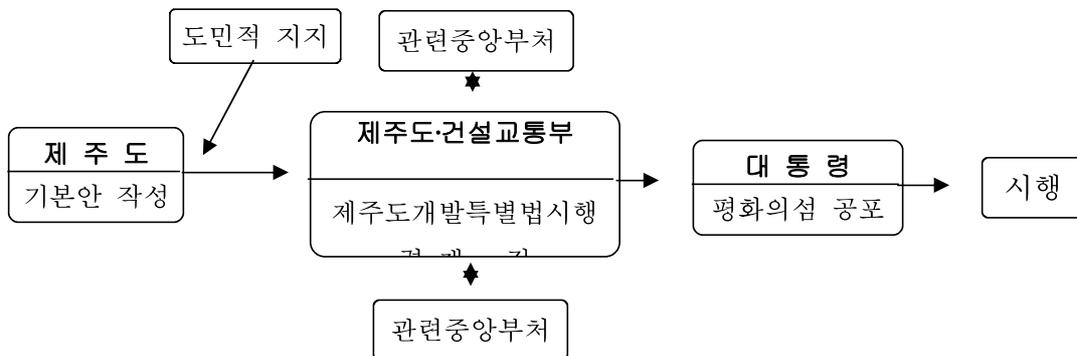
3) '평화의 섬' 지정 방법에 관한 검토

(1) 1안 : 대통령의 '평화의 섬' 선언 후 후속 조치



이 접근 모형은 제주도가 기본(안)을 작성하여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평화의 섬' 지정 근거 법률인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하고 구체적인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다.

(2) 2안 :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 후 '평화의 섬' 지정·공포



이 접근 모형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 지정 방안 및 그 구체적인 실천 사업들을 관련 중앙부처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를 기초로 '평화의 섬'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인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나서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대내·외에 '평화의 섬'을 지정·선포하는 방안이다.

(3) 3안 : 제주도 지방자치단체(도지사) 차원의 독자적 선포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기본적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제주사회의 복지와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 차원의 발전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양해하에 도지사가 직접 '제주 평화의 섬'을 선언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화의 섬' 관련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주도적인 노력이 궁극적으로 제주도와 제주도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도민헌장'이나 '선언문'을 통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고, 추후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획득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4) 私見

제 1안과 제 2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안이지만, 시일이 급한 경우에는 제 1안에 의하여 대통령이 먼저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한 다음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도지사에 의한 '평화의 섬' 선언은 대통령에 의한 '평화의 섬' 지정·선포와는 별도로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를 갖는 방식으로 행해질 수도 있으며, 또는 정부의 양해하에 '평화의 섬' 지정·선포를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할 시, 그 선언문에는 개인적·계층적·지역적·국가적 갈

등 및 대립의 해소와 평화 운동의 추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권·환경·복지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및 과제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지정·선포의 시점

제주 '평화의 섬' 지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은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 이미지를 활용한 국제교류·협력의 거점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평화 정착 및 통일,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질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가가 어떤 시기에 대내·외적으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여건은 물론 대외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적인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래와 같은 시점들이 '평화의 섬' 지정 및 선포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제 1안 : 2000년 서울 ASEM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ASEM은 아시아와 유럽국가간의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대규모 협력체로서 제 3차 ASEM 회의가 2000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ASEM 회의에는 30여 개국 5,00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신국제경제질서를 창출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ASEM 창설 취지와 서울 ASEM 회의의 주제가 제주의 '평화의 섬' 추진 배경과 일맥 상통하고 있음에 비추어, 서울 ASEM 회의 개최 시점에서 제주 '평화의 섬'을 선언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 ASEM 회의가 10월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제 2안 : 2001년 4·3 사건 위령제 개최에 즈음하여

4·3 사건은 제주도민에게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제 4·3 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함으로써 이를 도민 화합과 평화를 위한 계기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4·3의 역사적 의미를 '평화 운동'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제주를 인권과 평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1년 4·3 위령제 봉행에 즈음하여 중앙 정부나 제주도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함으로써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는 도민적 화합과 평화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및 세계 평화 구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제 3안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 및 정상회담 개최에 즈음하여

'국민의 정부'의 지속적인 햇볕정책의 결과로, 남북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담 개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교차 관광 등 동서 냉전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급격히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주도에 서 개최된 남북 국방장관 및 장관급 회담과 교차 관광 실시 등으로 북한은 물론 전세계로부터 제주도로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주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 시점을 활용하여 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하는 것도 그 상징성과 홍보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제주의 '평화의 섬' 이미지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는 데 유리할 지는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주 '평화의 섬' 추진을 변수가 많은 남북관계에 의존함으로써 그 의미가 歪曲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4) 제 4안 : 2001년 제 2회 '세계 섬 문화축제' 개최에 즈음하여

내년 5월에 제2회 세계 섬 문화축제가 개최되며, 이 시기에 국제 정치학회가

제주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학술 세미나에서 제주 '평화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주도 스스로 '제주 평화의 섬'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생각건대, 제주 세계 섬 문화축제가 국제적 축제이기는 하지만 지방 차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적 관심이나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한다.

(5) 제 5안 :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제주 개최에 즈음하여

월드컵 축구경기는 단일 종목 국제경기에 불과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에 가입한 회원국은 UN 회원국 수보다 훨씬 많은 202개국에 달하고 그 관심도는 올림픽을 능가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98년 프랑스 월드컵 TV 시청인구가 연인원 370억 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는 연인원 410억 명이 시청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서귀포시에서도 경기가 열리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는 제주도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에서의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 시점을 활용하여 제주 '평화의 섬'을 선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나, 이 경우 그 선포 시점이 너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2. '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구체적 사업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①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 ②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③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 유치, ④ 기타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주 '평화의 섬'에 관한 구체적 실천전략들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

한반도는 지구상에 동서 냉전 체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평화 관련 국제기구의 유치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 추진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또한 제주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대외에 각인 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유치 대상

어떤 성격의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하는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⁸⁾ '평화 관련 국제기구'⁹⁾를 우선적인 유치 대상으로 지적하고, 이어서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깊은 '관광 관련 국제기구', 그리고 '문화·학술 관련 국제기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유엔이나 유엔 관련 기구의 사무소가 거의 없는데, 이는 오랫동안 남북한이 유엔 미가입국으로 남아 있었으며 아직도 상호 대치 상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있다.¹⁰⁾ 그러나 바로 이러한 배경이 한반도의 남단인 제주도에 평화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소를 유치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협력과 교류, 그리고 세계 평화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UN 등 평화 관련 국제기구의 지역 사무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8)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 정립과 실천방안」(미발간) 참조.

9) 전문가들이 평화관련 국제기구를 최우선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제주 '평화의 섬' 자체에서 주는 이미지에 기초한 당위론적 차원의 응답으로 보인다.

10) 이는 한국과 중국 같은 분단국가의 존재, 영토와 해양 분쟁 문제의 상존, 군비의 확대와 군사 세력의 거대화, 북한의 핵 문제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국제기구의 유치 가능성

① 기존 국제기구의 유치 가능성

현재 우리 나라의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 가입 현황을 보면 유엔 및 산하기구 5개, 유엔전문기구 16개, 유엔독립국가 3개, 정부간 기구 68개 등 총 92개¹¹⁾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은 이미 특정국가에 소재하고 있어서 이를 제주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¹²⁾

다만 일본의 'Asian Cultural Center for UNESCO'처럼 국제기구 및 그 산하 기구의 동북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현지 사무소와 같은 지역 사무소의 제주 유치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현재 국제기구의 사무국이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를 제주도로 유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동북아 관련 신설될 기구 유치 가능성

유럽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창설된 것처럼 아·태지역 국가간에도 군비 축소 및 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구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협의체가 구성되는 경우 그 사무국이나 관련 산하 기구, 예를 들어 '지역분쟁 조정센터'(가칭) 등이 그 참여국에 분산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또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사무국이나 산하 기구의 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주 지역에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

11) 민간차원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면, 정치 분야 13개, 경제·금융 분야 80개, 사회 분야 124개, 문화분야 31개, 산업 분야 138개, 과학·기술 분야 147개, 교육·학술 분야 77개, 예술 분야 16개, 운송·관광 분야 48개, 사교·친선분야 26개, 농수산 분야 55개, 종교 분야 57개, 스포츠 분야 117개, 방송·광고·출판 분야 34개, 기타 80개 총 1,300개에 가입되어 있다.

12) 따라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새로이 신설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특정 국가가 사무국을 반납할 시 이를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야 한다.

③ 제주도가 주도하는 지역국제기구 본부의 유치 가능성

'97년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중국의 하이난 성, 인도네시아의 발리 주, 일본의 오키나와 현이 참여하는 다자간 관광협력체인 '섬 관광정책 포럼'(ITOP Forum)이 창설되었다. 이는 해당 도서 지역으로서의 공통점 및 그 다양성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확대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교류·협력'의 증진이라는 공동의 정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주도로 창설된 것이다.

제주도로서는 ITOP Forum의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동북아 지역의 섬 자치 단체들로 구성된 '동북아 섬자치 협의회'(가칭)로 발전시키고 그 본부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BESETO 협의회'나 '환황해 도시회의' 등 동북아 해역권의 지역 국제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그 본부나 관련 산하기구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유치 전략

①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련 인프라 구축

국제기구의 사무국을 제주에 유치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또한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시설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② 제주도의 지역 국제기구 참여 확대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UNDP(유엔 개발계획), UNEP(유엔 환경계획),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IULA(지방자

치단체 국제연합), 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METROPOLIS(세계 대도시협회), ICMA(국제 카운티 경영자협회) 등이 있는데, 이중 제주도는 IULA에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국제기구에 더 많이 가입할 필요가 있다.

③ 관련 행정조직의 강화

현재 제주도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는 투자진흥관실의 교류협력계이다. 하지만 교류협력계는 인력과 전문성 면에서 더욱 보강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이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조직강화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된 미흡한 행정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형 '제주도 국제교류·협력 지원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민간부문의 창의력과 정보 그리고 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한다.

2) '제주 세계평화 재단'(국제평화협력 연구소, 평화연구 센터) 설립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평화 사상 및 평화 운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책 개발·기획·조정·지원 등 집행적 기능을 전담할 조직으로서 '제주 세계평화 재단'(가칭)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는 '평화연구 센터'나 '국제평화협력 연구소'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이다.

'제주 세계평화 재단'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연구들을 종합하고 이를 평화운동 등 관련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기능

‘제주 세계평화 재단’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평화사상 및 이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평화운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구축을 위한 평화 회의, 군비통제 및 축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넷째, 평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평화운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평화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조직하며 평화 관련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안한다.

(2) 설립 방법과 주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 2항에 의하면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제주세계평화재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시행령에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중앙 정부의 지원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설립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국책연구원으로 국제협력 연구소나 평화재단을 설립하고, 필요한 설립과 운영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며, 단지 그 시설을 제주도에 입지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제주도가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연구소나 재단을 설립하되,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 지원과 지방 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다.

셋째, 제주도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자체 재원으로 연구소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넷째, 평화 관련 국제협력 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내 민간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의 연구소를 선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제주 ‘평화의 섬’ 구축과 관련된 관계 구조가 단순히 제주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한반도, 나아가 세계 평화 질서와 관련되고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독자적 재정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협력 연구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지원체계 아래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설립 시기

「제주도개발특별」 제 52조 2항에 “국가는 국가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제주세계평화재단’이나 국제협력연구소는 제주도의 추진 의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에 그 재원이나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느냐가 설립·운영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일단은 국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후 그 후속 조치로 연구소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 때까지는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제주문화 재단’에 그 기능을 포함시키거나 도내 대학의 관련 연구소에 그 기능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4) 재원 확보

국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을 추진하되,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가 부담할 재원에 대해서는 매년 발행되는 관광 복권 수익금의 10%를 적립하거나 삼다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일반회계를 통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제회의 신설·유치 전략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대외에 각인 되기 위해서는 평화 관련 국제회의를 신설하거나 관련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주

로 기존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국제회의 유치 대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¹³⁾에 의하면 국제회의 유치 대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크게 '평화 관련 국제회의'와 '관광 관련 국제회의'의 순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컨벤션 센터를 건설 중인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세계평화 이미지와 상반되는 국제회의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제주 '평화의 섬'이 수행하게 될 국제교류·협력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부합될 수 있다고 본다.

(2) 유치 방법

① 국제회의 수용 능력 강화

국제회의 주최자가 제주도 내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 수요 및 요구 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용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존 컨벤션 시설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건설중인 국제 컨벤션 센터의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② 적극적인 판촉 활동 전개

오늘날 정보화·국제화시대에 국제회의 유치 및 판촉활동은 지역의 종합적인 이미지, 문화수준, 편리하고 풍요로운 체재환경 등을 개최자의 관점에서 자세히 묘사하여 상시 비상 태세로 홍보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⁴⁾ 특히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컨벤션 시설, 접근 교통수단, 도로, 숙박시설 등의 컨벤션

13)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 정립과 실천 방안」, 미발간.

14) 그러나 국제회의 유치활동을 활발히 하여 참가자나 주최자가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도 실제도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관련 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제 컨벤션 도시의 요건은 국제 컨벤션의 연속적인 개최에 충분한 회의장, 숙박 시설 등으로 설정되고 있다.

국제회의 유치 절차는 크게, 개최국의 유치 결정, 개최 승인서 제출, 회의시설 답사팀 안내, 공식 제의, 개최지 결정, 개최지 확인 공식 서한 접수, 전담반 구성,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주 지역에서의 국제회의 유치 시에는 당해 국제회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제주의 평화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③ 민·관 협력형 국제회의 유치 전담기구 설치

유치 조직은 제주도와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 유치단'¹⁵⁾을 구성하는 방안과 국제회의 용역업체¹⁶⁾와의 계약을 통해 유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국제회의 전담기구를 정부 관광기구 내에 설치·운영하고 마케팅 활동과 관광정보 제공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도 제주도, 한국관광공사, 제주 컨벤션 센터, 제주 관광협회 등이 공동으로 상설적인 컨벤션 기구를 조직하여 회의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15) 제주도는 현재 2003년 IULA 총회와 2004년 PATA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16) 국제회의 용역업체(PCO: 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는 국제대회의 유치, 홍보에 서부터 결산까지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대행하는 조직으로서 현재 30여 사가 등록되어 있다.

<표 1> 주요 국의 국제회의 전담기구

지역	국 가	명 칭	비 고
미주	미 국	전국 300여개 도시에 Convention & Visitor 설치 운영	상무성 산하
구 주	프랑스	Paris Convention Bureau 등	지자체 및 민간공동, 도시별컨벤션부서로 독자 운영. NTO내 전담부서는 주로 해외 홍보 활동 전개
	독 일	Berlin Convention Bureau 등	
	영 국	London Convention Bureau 등	
아 시 아 주	일 본	Japan Convention Bureau(JNTTO 내) 및 City Convention Bureau	지자체별 컨벤션부서로 운영
	홍 콩	Hong Kong Convention & Incentive Travel Bureau	HKTA(Hong Kong Tourist Association)내 독립적으로 컨벤션 전담부서로 운영
	싱 가 포 르	Singapore Convention Bureau	STPB(Singapore Tourist Promotion Board)내 독립적으로 컨벤션 전담부서로 운영
	필리핀	Philippine Convention & Visitor Corporation	관광성 산하의 독립기구로 운영
	태 국	International Convention Division	TAT(Tourist Authority of Thailand)내의 컨벤션 전담부서로 운영
	말레이 지 아	Convention & Incentive Division	MIPB(Malaysia Tourism Promotion Board)내의 컨벤션 전담부서로 운영
	중 국	Dept. of International Convention	국 산하에 컨벤션 전담부서 운영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회의 산업현황」, 1996

4) 남북대화 · 교류 센터화

최근 남 · 북간에는 전에 없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 동안 국방부장관회담, 장관급회담, 교차관광 등이 제주에서 개최되는 등 제주가 남북 대화 및 교류의 장소로 급격히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최근 남북교류와 대화의 장소로서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는 사실이다.¹⁷⁾ 이러한 의견은 외부적 변수,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에 의해 언제든지 남북 대화의 중심지로서의 제주의 역할이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남북 대화 및 교류의 장소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회담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회담 장소를 상설화하고,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을 비롯한 북한 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셋째, 백두-금강-한라를 연결하는 산악 테마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한반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백두산 관광에서부터 동부의 금강산 관광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의 한라산 관광에 이르는 산악 테마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관광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넷째, 제주와 지역적 성격이 유사한 북한의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다각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한다.¹⁸⁾

5) 4·3특별법 관련 사업과의 연계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추진 중인 '4·3 특별법'에 의거한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평화공원은 대내적으로는 4·3 사건으로 분열된 도민의 통합을 촉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를

17)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남북 대화의 場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특히 북한의 제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북한이 통일을 주장할 때 제주도가 한반도의 최남단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는 점, 4·3 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등이 북한의 최고정책결정자가 제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한 원인이란 지적이다.

18) 이와 관련하여 고성준 교수는 백두산이 소재한 양강도 및 郡과 자매결연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전계 논문, p. 46).

구축하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입지 시설

① 위령탑과 묘비

평화공원에는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탑과 희생자의 묘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외에도 태평양전쟁 제주인 희생자와 한국전쟁의 제주인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을 함께 세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4·3 사료관

특히 4·3 사건 진상 규명에 필요한 미군의 정보 보고서, 극동 함대 보고서, 미 대사관 문서, 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와 정부기록 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4·3 관련 수형인 명부, 판결문, 증언 녹취 등을 소장·전시한다.

③ 평화박물관

4·3 사건과 관련된 유물을 중심으로 제주인의 평화 및 관용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유물들과 국내·외 전쟁과 관련된 자료와 유물을 보관·전시함으로써 제주인의 후손들과 관광객들에게 평화 사상을 고취하고 평화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원 조달

평화공원 조성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4·3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근본적으로 4·3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¹⁹⁾

19) '99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도지사의 건의에 따라 4·3 공원 부지 매입비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국내 유관 기념사업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과의 연계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를 21세기 동북아의 경제 주도권의 선점을 위한 세계화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활동의 평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지역으로 개발하며, 나아가서 남북협력 및 국제교류를 연계하는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특성을 살려 우선적으로 국제 관광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 방향과 밀접·불가분의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제주도가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²⁰⁾ 외부인들은 제주에 대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즉, '관광'과 '평화'의 통합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며, 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사업도 이러한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평화의 섬' 지정 및 추진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1) 제주도(지방정부)의 역할

(1) 도민적 합의와 지지 확보

제주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의 섬'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

20) 현재 제주도의 대외적 이미지는 혼재되어 있어 차별화된 고유한 지역 이미지가 없으며, 따라서 국제적 마케팅 전문가에 의한 관광과 평화를 통합한 분명한 이미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²¹⁾ 조사 대상자의 63.0%가 ‘평화의 섬’ 추진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민이 평화의 사상과 상통하는 풍요한 정신적 문화유산²²⁾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제주 ‘평화의 섬’ 조성에 관한 도민적 합의는 형성되었다고 보며, 다만 앞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추진 조직 신설·운영

제주도는 도청 내에 중앙정부의 ‘제주평화의 섬’ 지정을 유도하고 ‘평화의 섬’ 조성을 전담할 가칭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추진기획단’²³⁾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칭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추진기획단’의 단장은 행정 부지사로 하고, 관련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위촉·구성하며, 국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논리를 개발한다. 그리고 지정 후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제주도의 중앙정부에 대한 접근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적·정치적 접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가칭 ‘제주 및 평화 사랑 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접근능력을 제고할 필요성도 있다²⁴⁾. ‘제주 및 평화 사랑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여론 조성과 각종 평화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투자 재원

21)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전계보고서.

22) 특히 제주의 삼무정신은 제주인의 평화사상을 잘 나타내 주는 정신이라 하겠는데, 삼무정신 중 거지가 없음은 가난과 착취의 부재를 의미하고, 도둑이 없음은 안전과 안정을 상징하며, 대문이 없음은 위협의 부재 속에서 공동의 조화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으로 평화사상과 상당한 밀접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제주의 전통적인 삼무정신에 바탕을 둔 전통적 평화공동체를 재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 현재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제주 ‘평화의 섬’ 유형 중 경제특별화 모형이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전담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24) 특히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제주를 방문했던 각국의 정상과 유력 인사, 세계적인 평화사상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평화에 대한 제주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에 대한 유치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민관협력형 '제주 평화의 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평화 관련 학술행사 개최, 학생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 관련 문학작품 공모 등 도민들의 평화의 섬에 대한 관심을 조성해 나가며, 이외에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세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화 상징물에 대한 사업도 담당하도록 한다.

(3) '평화의 섬' 홍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회담 및 남북 대화의 주요 무대로 이용되고 있는 제주도는 이미 '사실상' 평화의 섬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홍보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제주 '평화의 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쇄물, 그리고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제주 '평화의 섬'의 이미지가 더욱 고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가 열리는 기회를 이용하여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벤트나 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그 홍보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 국민이 방문하는 주간을 그 나라 또는 정상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하는 것도 홍보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미국의 날' 또는 '클린턴 주간' 등으로 명명하여 그 나라 또는 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 그 나라와 정상에게 제주도의 이미지를 심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문자와 함께 이에 걸맞은 로고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서 또는 관공서의 문양, 혹은 행사시 휘장으로 사용하는 등 생활화하고 평화의 섬에 대한 노래를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공항 진입로와 주요 관광지에 '평화의 섬 제주' 등의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4·3 평화공원에 평화 또는 '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제주의 평화 이미지를 항구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민간 및 시민단체의 역할

제주 '평화의 섬'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사회에는 아직도 상충된 이해관계에 따른 계층간·지역간의 대립과 갈등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대립·갈등의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는 한 '평화의 섬'의 효율적 추진에는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²⁵⁾ 따라서 도민의 내부적 대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각종 종교단체나 시민·사회단체는 민관협력형 '제주 평화의 섬 추진협의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도 있으며, 스스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통해 평화 사상을 확산시키고 평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평화운동의 전개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평화교육 및 도민의식의 선진화

세계적 교류의 시대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제주인이 스스로 평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세계시민은 하나의 가치나 문화 척도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가치관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원주의 및 관용과 평화의 정신이 내면화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교육기관과 민간·사회단체에 위한 평화교육을 지원·장려하고 이를 기초로 평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평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갈등의 비폭력적 해

25) 고성준, 전개논문, p. 46.

소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가치인 평화를 지키고(peace keeping) 만들어 내며(peace making) 더욱 증진시키는(peace improving),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⁶⁾

특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 '평화의 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비폭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하며, 마음속에 내적 평화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관용, 동정심, 공유, 배려의 자질을 확고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국제 차원의 평등의식과 연대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의 섬' 교육을 통하여 제주인이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밖에 각종 종교단체나 시민·사회단체도 자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IV. 결 론

제주 '평화의 섬'의 기초가 되는 평화의 개념은 내부적으로는 제주 사람들간의 갈등과 대립 없이 正義와 조화로움이 실현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고, 대외적·전략적 측면에서는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지역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적 존립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제주형 '평화의 섬'은 이러한 平和觀을 기반으로 하여 평화 사상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평화를 창출·확산시킬 수 있는 평화 운동 및 평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기초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 '평화의 섬' 전략을 통하여 제주로 하여금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중앙 그리고 세계와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 도민간

26)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한울아카데미, 2000, p. 61 참조.

의 갈등과 대립이 극복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는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천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특히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을 통하여 경제적 차원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로 하여금 평화 사상 및 평화 운동을 연구·실천하는 중심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서 국제적 평화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투자·경제 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국제자유도시(경제특구)로서의 기능이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제주도가 남북 대화 및 교류의 중심지로 부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평화 관련 국제회의 및 연구 활동의 중심지로 개방함은 물론 지역적 분쟁해결 및 안보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제주도가 일종의 '평화지대'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 '평화의 섬'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도민간의 협력 및 각각의 역할 수행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법·제도적인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52조에 근거하여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하기 위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기초로 평화재단이나 평화연구센터의 설립 등 관련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신정현, "현대세계와 평화연구 : 평화연구의 방향모색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 1권, 제1호, 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 1981.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정립과 실천 방안」(미발간 자료).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과 한반도 평화」(학술세미나 자료집), 1999.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 1997.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제주 평화의 섬 모델과 추진전략 모색」(워크샵 자료집), 1998.

제주국제협의회, 「평화와 번영의 제주」, 신라출판사, 1993.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전략

安 英 勳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목 차 >

- I. 머 리 말
- II. 제주 '평화의 섬' 전략과 국제교류협력 기반구축
- III. 제주 '평화의 섬'에 기초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전략
- IV.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전략
- V. 결 론

I. 머 리 말

국제교류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사람, 상품, 자본, 정보 등이 세계 각국의 경을 넘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간의 협력을 의미하며,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차원의 국제적 수준으로 나타나는 상호관계성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국제교류의 시발은 평화유지를 위하여 시작되었고, 이를 통하여 외국 자치단체들 상호간의 문화, 통상, 학술분야 등에서의 협력관계는 관련 국가의 발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세계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그 기본사업은 바로 자매결연(sister-city affiliations)에서부터 시작이 되

어 왔다¹⁾. 자매결연의 기본적인 개념은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생각과 문화와 고통의 문제를 서로 나누어 협력정신을 통해서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자는 이상적인 바람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는 통상적으로 그 유형이 바로 자매결연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주민들 상호교류로, 또 어떤 이벤트에 대하여 협력차원에서의 지원환경을 만들어 간다²⁾. 다시 말하면, 세계화의 힘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등 이전에 따로 따로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을 점차적으로 함께 혼합시켜 국내외 문제들을 통합시켜 나타나도록 한다.

오늘의 주제인 제주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제주도의 국제교류협력도, 그 의미는 바로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써 동북아 및 세계의 자치단체들과 교류협력을 통한 안정 및 평화에 공헌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이자 지역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이 전략의 목적은 제주도를 단순 관광지가 아닌 가깝게는 동북아시아, 넓게는 세계 각국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평화회담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평화에 기저를 둔 자치단체간 경제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제주 '평화의 섬' 개념에 기초한 국제교류협력은, 1995년 9월 국제지방정부연맹(IULA)이 제32차 세계총회를 열어 지방정부 국제협력(Municip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IC)의 주목적이 외국정부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라고 선언한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 제주 '평화의 섬'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 방향은 순수한 국제협력관계를 추구하여 비군사적이며 경제교류가 주가 되어 제주도 및 인근지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총체적인 지역개발전략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전략을 기초로 한 국제교류협력이 가져다 주는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는 '평

1) 미국의 국제교류 역사의 시작은 먼저 미국 대통령인 Dwight Eisenhower의 격려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주정부와 통상부 등이 지원을 하고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게 되었다. 교류활동들이 처음에는 주로 문화적 교류의 개념이 핵심이 되어서 발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도는 경제적 목표와 정치적인 지지를 포함하는 국제교류관계의 양상을 띄게 된 것이었다 (conference of Mayors, Annual Report/ Executive Committee and Advisory Board Meeting, 1993).

2) Jun Jong S. Wright Deil S., 1996:327.

화의 섬'에 대한 각종 이벤트와 시설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 제주도의 위상 제고, 지역의 위상 제고에 따른 주민의 정체감 확보로 심리적 안정성, 자신감의 고양, 관광 상품의 개발과 다양성을 키울 수 있고, 외국인의 자유 출입국, 기반산업 시설의 확충과 함께 연계된 지역개발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³⁾.

이 시각에 기초하여 본 발표문에서는 먼저 제주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⁴⁾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기본 방향 내용을 파악한 뒤, 이 개념을 기초로 하여 자치단체가 이루어야 할 핵심적인 국제교류협력 기반구축 노력을 적시한 후, 이러한 기반 위에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할 추진전략을 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주 '평화의 섬' 전략과 국제교류협력 기반구축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환경변화들을 고려해 볼 때, 지역외부환경의 경우에는 자유무역 및 개방화의 가속, 남북경협 확대,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진전, 환경친화적 정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지역활성화 전략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들을 보면 전통산업의 재활성화, 지역별 차별화 전략, 신규산업 발굴로 돌파구 마련, 지역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지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의 논의는 제주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국제교류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외국의 카운터 파트너와의 국제교류협력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구성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3) 고충석, 김부찬 외, 평화의 섬 지정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 : '평화의 섬' 기본 개념은 본 연구서를 참조하였음.

4) 1996년 결정된 오키나와 섬의 국제도시 형성 구상도 평화 공존 자립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자유무역지대 확충, 국제정보 금융도시 국제컨벤션 유치와 관광리조트 등이 중심이 되는 국제도시,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변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1. 위기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1) 제주도의 위기환경

제주도는 '80년대 이전에 자연경관 하나만 가지고도 신혼 여행지로 각광을 받았으나 IMF 금융위기를 겪은 후유증 이후 제주도의 특화산업인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이 최근 생산효율성, 경쟁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세계는 WTO 조직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개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감소된 제주도로서는 현재 긴박한 위기감을 맛보고 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97년에 436만명에 이르던 관광객이 '98년에는 329만 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으며 관광수입도 1조 750억원에서 9,558억원으로 크게 줄어 들었고,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도 수입개방, 국내 과일소비의 한계, 해저리 현상으로 성장의 한계를 맛보고 있다. 또한 고급인력이 취업할 만한 기업체가 많지 않아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들이 취직을 못하거나 부득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함으로써 제주도의 인력확보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이러한 위기상황은 IMF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 원인 이외에도 최근 관광산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국제관광지로서의 실제 이미지가 떨어져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관광지와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하여 발생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⁵⁾.

제주도 관광산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을 보면⁶⁾,

- 관광환경과 관광시장의 소비 패턴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때 제주관광의 중·장기적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Tourism infra) 구축사업의 미흡 즉, 3개단지 20개지구개발, 국제컨벤션센터건립, 중·대규모 정기이벤트, 관광전문

5) 참조, 인터넷 상의 제주도 기획실 공개자료.

6) 강인택, 제주도 해양 어촌관광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도지방공무원 중견간부양성과정, 1999년.

조직, 관광부문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인프라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 국내·외 관광시장에 대한 경쟁우위의 마케팅 전략(marketing strategy)이 없어 기존시장에만 의존하고 창조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 육상의 자연자원 감상 및 휴양형 관광패턴으로 한계관광(margin tourism)에 머물러 있었으며, 국내·외 관광시장의 확장, 관광시즌의 확장, 관광소비의 다양화 및 충실화, 신규영역의 관광사업체의 증가 등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기후와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북경, 상해, 도쿄, 오사카, 서울 등 아시아 5대 도시와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고 일본, 홍콩,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시아 무역 흐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지리 경제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위치는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이 국제자유도시 모델로서도 손색이 없고 여러 면에서 이 도시들과 비교해 보아도 제주도의 여건은 경쟁력이 있는 최적지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제9회 동아시아 호프스타크대회 (8/25-8/30) 등 스포츠행사와 제주↔북경간 국제항공노선의 신설(8/3)로 중국관광객도 증가하였고, 하계휴가, 관광이벤트, 스포츠대회 등이 연속 개최되면서 래도 관광객이 전년동기 대비 15~17%정도로 호조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대응전략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유지역 조성 등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과 '평화의 섬' 지정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국제교류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즉,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평화의 섬'에 기반을 둔 국제화,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2) 제주 '평화의 섬' 전략에 의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지역 발전전략의 모습으로 제주 '평화의 섬' 지정에 관한 논의가 '91년 5월 미

국 뉴욕에서의 평화에 관한 세미나로부터 시작하여, '98년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김부찬 교수의 <제주 '평화의 섬' 추진전략 보고서>에서 보다 구체화되었고,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실천의 하나로 '99년 12월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에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이를 실천할 전략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동법 제52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 '평화의 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즉, 국제 평화 및 협력 기구의 유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국제 평화 및 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기타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등7).

이상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가 제주도에 주는 의미를 국제교류협력의 시각에서 해석해 본다면,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 개발의 기본정신이고, 평화의 개념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지역과 중앙 세계 자치단체간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고, 기본생활권 보장의 모범이 되는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평화의 이미지란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익의 극대화가 달성된 상태, 즉 무국경화 시대에 지역간 교류의 활성화로 상호이익의 극대화와 지역간 균형적 질서 확립을 추구하는 자세라고 해석할 수 있다8).

2. 국내 협력네트워크 구축

1) 제주도내 국제교류협력 담당 자치단체간 협의체 조직

현재 제주도의 경우는 미국 Hawaii州 인도네시아 Bali州 러시아 Sakhalin州 중국 海南省 (4개국 4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제주시는 일본 와카야마(和歌

7) 이를 위하여 국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직접적인 주체로서 자치단체인 제주도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 교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율적인 교류협력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제53조).

8) 고충석, 김부찬 외, 평화의 섬 지정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

山)縣 와카야마(和歌山)市 중국 廣西壯族 自治區 桂林市, 남제주군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縣 나가(那賀)郡 중국 遼寧省 興城市 뉴질랜드 파파쿠라市, 서귀포시는 일본 사가縣 가라츠(唐津)市, 북제주군은 중국 山東省 萊州市, 미국 California州 Santarosa市 일본 효고(兵庫)縣 산다(三田)市 등 4개시군이 4개국 9개 도시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다.

각 자치단체가 각 자매결연국과 관련업무의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 자치단체 상호간 자매결연 및 국제협력 관계를 전담하여 이에 관련된 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일본 미국 중국이 주류를 이루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정책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직의 방식이 협의회 또는 위원회(conference or committee)의 경우가 될 때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관련 지방의원들의 모임, 실무자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공동의 프로그램, 상호 공익에 관련된 공동의 문제에 관련하여 논의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일본의 컨벤션뷰로와 같이 협회 또는 제3섹터의 관리방식에 의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교통 및 숙박시설과 공동의 장비, 공동활동을 함께 조정해 가는 유연성 있는 조직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재외국 한국사무소들과의 네트워크 연계

미국의 각 주정부나 일본의 경우는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등 많은 외국 자치단체기구들이 우리 나라에 한국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워싱턴주정부는 무역증진과 양국간 투자유치, 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 및 교육사업 교류를 목적으로 1999년 9월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이외에도 도쿄, 타이페이, 상하이, 블라디보스톡, 파리 등지에 사무소를 활용해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우호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무역전시회참가, 양국 경제사절단 파견, 대학간 자매결연추진 등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CLAIR도 영국, 프랑스 등 각지에 같은 사무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들 사무소들과 연계를 갖고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환 등의

활동적인 연계를 갖는다면 간접적이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국제교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도내 각 자치단체가 상호협동으로 연계장치를 마련해 두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의 3자 연계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3.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 활용

현재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들은 도시화에 따라서 효율적인 서비스의 공급, 먹는 물,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쓰레기처리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서로가 경험을 나누며, 기술과 지식을 교환하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절실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 외국 자치단체에 대하여 1대1 자매결연 형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그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국제지방정부연합(IULA)

국제지방정부연합 6개 지국 중 제주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과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IULA의 주임무는 학습과 교류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역량, 지방행정의 개선 등을 유도하고, 지방경영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⁹⁾.

- 자치단체간 국제협력사업(municip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IC)
- 국제자매도시연합(Sister cities international, SCI)의 미국, 일본 등의 국가간 경험과 기술교육 등을 교환하는 삼자교류사업(Trilateral Exchange Programme)¹⁰⁾

9) 한편, 국제 지방정부네트워크들의 참여에 있어서 대표적인 위원회로는 4대 국제지방정부연합체인 세계지방자치단체연맹(IULA), 세계도시연합(UTO),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세계주요도시정상회의(Summit)로 구성된 G4가 있다.

10) <http://www.iula.org/IULA-E0914.html>.

: 현재 일본의 쿠루메시, 미국의 모데스토시, 인도의 비자야와다(Vijayawada) 시 삼자가 모여 인터넷을 구축하여 주로 교육과 전문기술의 교환 등에 역점을 두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추꾸바시와 멕시코의 Hermosillo, 미국의 어빈시 등은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추꾸바시의 경험을 배워 도시와 농촌개발에 있어서의 수자원관리, 수질보전 등에 협력하고 있다.

2) 미국의 국제도시-카운티경영협회(ICMA)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ICMA)는 미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화와 민주화사업(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경영훈련계획을 추진하는 국제연수(International training),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국제도시환경경영사업(International urban environmental management), Best practices 심포지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과 새로운 사업계획과 실천계획을 확립하려는 목적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3) 영국의 국제전문교육개발국(Internantional training and development unit)

국제전문교육개발국의 주요 임무는 외국의 지방정부들에게 영국 지방정부의 여러 경험을 전수하고, 개발국 지방정부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기술적인 원조, 개발에 대한 자문, 기금지원, 기획관련 지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자매결연도시세계연맹(Fédération mondiale des Cités Unies et Villes jumelées, FMCU)

1957년에 창설된 비정부조직으로 현재 109개국 이상의 자치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경영과 환경보전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과 자치단체간 모든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5) 유럽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 유럽지방정부행정가협회(European Local Government Officers, ELGO)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27개국 14,079 지방정부들과 관련이 있다¹¹⁾.
- 유럽지방정부협의회(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 , CEMR)는 본래 지방자율화 유럽헌장에서 유래하여 유럽 각국이 비준한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협약이 탄생하면서 성립되어 유럽지역에서 10만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들을 연방형태의 협의체로 결성하고 있다.
- 유럽기초광역자치단체총회(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Europe, CLRAE)는 기초자치단체의회(Chamber of Local Authorities)와 광역자치단체의회(Chamber of Regions)로 구분되며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도시 농촌지역 발전정책, 환경보전정책, 문화교육사회복지와 국민보건 정책 등으로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럽차원에서는 ENTO(European Network of Training Organisations for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교육기구를 세워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기술과 경영기법을 전수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아시아 국가 등 비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국제법상의 협력(범인인도, 야생환경지역의 보호, 국제범죄 방지노력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회원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효과적인 민주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민주발전상임위원회(Steering Committee on Local and Regional Democracy)를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관계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¹²⁾.

4. 정보 네트워크화를 위한 환경구축

1)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활용

11) ELGO와 관련된 유럽의 지방정부 명단 : <http://www.elgo.co.uk/ELGCOV.HTM>.

12) 참고 :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1985), <http://www.coe.fr/cplre>.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1999년 11월 마닐라의 정상회담에서 정보기술(IT)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디지털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E-Asean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보화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수적이며, 정보화에 의한 지역간 외국 자치단체간 네트워크의 구축은 공공수단으로서 상호 지역의 기업인, 주민,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 주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이게 하여 이동하지 않고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중요한 행정환경요소가 된다.

최근 세계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월드링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5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가에서 3만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다른 사회 또는 국가의 학교와 연결하고 지식의 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원거리교육 등은 과거 아무도 꿈꾸지 못하였던 독점없는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의미한다.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활용

인터넷의 등장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들을 세계로 직접 내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수출증대와 외자유치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³⁾.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국제적 행사의 홍보, 해외연수 일부기능의 대체, 온라인 민원처리, 외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정보제공, 문화유산 정보의 제공 등으로 국제화를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협력 업무와 인터넷 정보관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외국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 컨텐츠의 개발과 확장으로 정보의 유형을 다양화 하고 외국어로서도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13) 참조 : 유평준, 인터넷과 지방의 국제화, 국제교류, 2000년 2월, vol.38.

5.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과 국제기구 유치

국제회의 산업은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외화의 수입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87년부터 <국제회의 도시계획>을 세워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국제협회의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ULA)의 1998년 통계에 따르면 나라별 개최실적으로 미국이 전체 11.48%를 점하고 있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나라별 순위에서 약 30위권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제회의 유치전략에 가장 큰 제약요소로 전문적인 국제회의 시설과 부대시설 등의 절대 부족이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구하는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장소로서의 이미지부각 등 궁극적으로 국제협력기구들의 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기초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항과 항만, 도로, 첨단 정보통신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기본이 될 것인 바, 기반정비 부분에서 제주도는 2001년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2010년을 목표로 제주공항과 제주항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1)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활용

현재 건축 중인 제주컨벤션센터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3,500명 수용의 컨벤션센터로서 바로 이러한 국제교류의 근간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행정체계를 만들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교토 컨벤션센터를 예로 들 수 있다. 일본 정부에 의해서 국제컨벤션도시로 지정된 교토는 회의장시설을 전통과의 조화 속에 잘 갖추어 놓았으며, 98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총436건의 국제회의 중 198건(일본내 개최도시 중 4위)을 개최하여 교토의 매력을 알리면서 세계온난화방지 교토회의(97) 세

계문화유산위원회(98) 등 세계에 잘 알려진 국제회를 유지하여 국제회의 도시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활동은 바로 교토컨벤션뷰로(convention bureau)가 중심이 되어 여러 컨벤션시설(국립교토국제회관, 교토리서치 파크, 교토부종합건본시회관 등)과 함께 컨벤션 참가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지역내 44개의 호텔을 종합적인 유치 및 관리체계 하에서 공동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2) 국제기구의 유치 신설 및 기존 국제기구의 보완 발전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국제기구와 그 본부기구를 제주에 유치하는 사업을 구체화 시켜 본다. 이를 평화의 섬과 관계를 맺도록 확대해 간다

제주도가 중국 하이난성, 인도네시아 발리주, 일본 오키나와현 등과 97년 창설한 섬관광정책포럼(ITOP Forum)은 관련 지역의 행정당국과 관광 진흥, 교류협력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섬의 발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세계평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한일해협지사회의,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이 깊은 BESETO협의회, 환황해도시협의회 등 인근 지역간 국제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치작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6.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화 추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 동북아시아의 관광교류와 물류, 금융의 중심지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자유도시를 개발하고 관광자유도시 실현으로 조성된 대외적 인지도, 기반시설, 자본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물류·교역·금융까지 포함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일반적으로 사람·상품·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도시공간으로서 관광·국제무역·생산 주거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해 포동지구 서태평양 지역의 국제무역 금융중심지 조성, 일본은 오키나와에, 말레이시아는 라부안에 국제투자자유지역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출입국 관련조항, 치안 행정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방세와 국세의 세금감면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의한 인·허가업무의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7. 자치단체의 내부조직 변화

자치단체의 조직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지식경영조직체로 새로이 구축함으로써 지방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지역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해외 연수와 외국어 교육의 지속과 함께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산업요원으로서의 변신이 국제교류 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행정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조직은 가능하면 계선조직을 배제하고 전문직 담당관제나 실 제도를 활용하여 일반부서가 아닌 지역발전과 국제통상을 함께 담당하는 조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조직변화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내부집중화에서 네트워크화로 되어야 한다 : 즉 조직내부는 핵심기능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기능은 더 잘하는 외부조직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직에 아웃소싱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인다.
- 기능단위에서 프로세스단위로 변해야 한다 : 고객의 요구에 맞는 신속하고 단순하며 유연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 단위로 조직을 설계한다
- 통제중심에서 지원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 : 조직 내 스태프부서와 업무 부서간의 역할조정이 필요하고
- 분업화에서 다기능화로 바뀌어야 한다 : 미래조직은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여러 기능의 혼재된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 개인의 다기능화를 통한 업무처리의 유연성 증대, 개인능력의 향상에 의한 성취감을 얻도록 설계해야 한다

- 직위지향에서 가치지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 직무구조와 권한계층이 직위체계와는 무관하게 수평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III. 제주 '평화의 섬'에 기초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전략

제주 '평화의 섬'에서 평화의 이미지는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익 극대화가 이루어진 상태 즉 상호 지역간 균형과 질서 확립 및 지역복지공동체의 구현을 추구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자치단체 상호간의 사회 문화적 교류확대는 협력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각 지방의 사회,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치단체간의 차원을 넘어서 각 자치단체의 사회단체들간의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문호의 개방, 각 자치단체의 고유의 경험을 서로 부딪쳐 보고, 그러므로 해서 자치단체의 능력과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켜 갈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이 의미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단체 행정기관, 시민협력단체, 전문경제단체, 기업, 여러 부류의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¹⁴⁾.

1. 지방문화의 세계화 함양

문화교류는 한 나라의 특정한 지방 또는 한 도시에 대해서 그것들이 갖고 있

14) Boinvilliers, 1996:27.

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관광차원에서의 잠재적 가치를 외부 세계와의 접촉으로 높여 보려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문화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남의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함께 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주도의 문화적 개성이 돋보이는 한라문화제, 세계섬문화축제, 기타의 이벤트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경험삼아 제주감귤축제, 한라산눈꽃축제, 한라산어리목 및 신제주로터리 등과 같은 지방문화 행사에 더욱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내실 있는 주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의 지방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발교육센터(development education centre)들을 후원하고 있다. 네덜란드 지방정부는 COSsen이라고 부르는 22개의 DEC들에게 연간 1백만 길더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시민교육을 통하여 제주의 전통적인 삼무정신과 연관된 역사적 유물, 문화적 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추구하여 그 실천과제로서 전통문화의 발굴과 육성, 역사 유적지의 개발, 박물관 기능의 강화, 문화예술의 창조 여건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2. 민간자원을 활용한 국제화 의식 고취

전 사회구성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고양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을 상대로 기초생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주부교실, 기타 강연회, 시민교양 강좌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을 확대 실시하는 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NGO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교통질서, 상거래 질서, 위락질서 등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공동의 비전과 이익을 찾아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97년 독일의 브레멘에 모여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브레멘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¹⁵⁾.

외국인이 살기 좋은 곳으로 꼽는 도쿄도를 보자. 도쿄도의 인구는 1200만, 외국인 등록수는 '98년 12월 현재 약 30만명(한국 북한 등 10만명)으로 수도로써 전세계인이 모여 비즈니스 관광 학습 등 다양한 외국인이 살고 있다. 이에 도쿄도와 구시정촌이 연계하여 외국인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 : 지역특성에 맞는 주제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 도서관의 개방, 특정요일을 정하여 외국인과의 상담시간 마련,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보육원, 학교 병원 등에서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자원봉사제도
-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 외국어 출판물에 의한 일상 행정정보(도정, 구정, 시정 등) 제공, 생활정보 및 관광 등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안내, 인터넷에 의한 정보제공,
- 외국인에 대한 교육 충실 : 귀국자녀, 외국인 아동학생, 기타 파견외국인 등에게 수업료 경감의 보조금 보조
- 보건 의료제공 : 유아검사,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시책의 수혜, 도쿄도 보건의료정보센터에서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 복지혜택부여 :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령자복지, 장애인복지 등 복지시책 제공
- 주택대책마련 : 부동산 임대차 매뉴얼을 작성하고, 각종 보조제도의 운영을 외국인과 차별하지 않고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많다.

이외에도 지역언론과 방송매체를 이용한 각종 시책과 사업의 이해와 협조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외국인 봉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¹⁶⁾.

15) 국제화의 환경변화 : 1997년 3월 13일 독일 브레멘시에서 개최되어 채택된 Bremen 선언 Business and municipality : new partnerships for the 21st century.

16) 하마자키 다카시,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장), 외국인이 살기 좋은 국제화된 선진도시 : 국제도시 도쿄의 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교류, 2000년 8월, p.29-31.

3. 지방공직자의 행정능력 향상

IULA는 1960년대 이후 국제지방정부간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1988년부터 매년 두차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와 유사 프로그램들이 UTO, CMER, Citynet 등의 국제지방정부연합체들에 의해 개설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프로그램들은 EU, UNDP, 세계은행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제주도 내 자치단체들도 이들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방공직자에 대하여 국제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 일본 자치성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에서 공동 주관하는 협력교류연수 프로그램 : 96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6-10개월간 일본 자치단체에 파견 등의 연수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 국제화재단과 미국 미시간주립대와의 협력으로 고위정책관리자 해외연수 프로그램 : 단체장 및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세계 정세와 각종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리더쉽과 국제화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마련된 연수는 미국의 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자치에 관련한 모든 협력관계 등의 비교연수를 체험한다.
- 국제화재단 주관의 지방공무원 NMP(New Millennium Pioneer) 해외연수 프로그램 : 지방의 국제화를 선도할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지방공무원을 선발하여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이 활발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여 행정 각 분야의 연수학습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2000년도 외국공무원 초청연수사업> (일명 K2H : Korea heart to heart) : 이 사업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동아시아의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6개월간 우리 나라 자치단체에 연수를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과 해당국간의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시행하여 처음 9명이 9개 자치단체에서, 올해는 중국 15명, 베트남 3명, 몽골 2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하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사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적교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4. 자치단체 주체의 지역경제 추진전략

1) 세계시장 진출전략

2000년 1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북경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국지역의 무역상담회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올 5월의 중국무역 상담회도 12개 자치단체의 35개 업체들이 참여하여 6천5백만불 상담과 2천 6백만불의 가계약 성과를 올린 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동경, 프랑스의 파리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이들 조직의 정보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민간기업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며, 투자무역 상담회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겠다.

기본적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사회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무소를 이용한다.
- 현지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업이 해외진출 초기부터 개발, 생산, 마케팅 모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필요하므로 자치단체, 사무소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 인적네트워크, 문화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 기업 비즈니스의 성패는 신뢰 구축에 달려 있으므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현지 벤처기업

17) 서정대, 지방 중소 벤처기업의 세계시장진출과 우리의 전략, 국제교류, 2000년 7월, 제 43호, p.11.

인, 변호사 등 사람들과의 인적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뢰적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현지 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 :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투자자들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다

2)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 인천광역시의 사례¹⁸⁾

인천광역시는 '99년 10월 제80회 전국체전, 인천시민의 날 중 해외자매도시, 대한체육회 해외지부, 해외인천무역사무소, 무역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조 채널을 통해 대규모 해외바이어의 자연스런 방문을 유도하여 고장의 역동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수출상담,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과 기업인의 사기확대 조성 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천경제인의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 대규모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Inchon international trade mart 99)를 개최한 바 있다.

전략적으로 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의회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현지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 단체 등을 통한 사업홍보로 참여바이어에게 사업의 신뢰도를 높여 목표치 이상의 신청수를 기록하였으며 동시에 KOTRA를 통한 바이어 모집을 하였다.

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상담회 개최 1주일 전, 총 9개국 106개사 159명의 바이어 참가를 결정하였고, 상담장소를 인천송도비치호텔 내 대회의장의 3개 룸, 인천상공회의소 회의장 등 2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또 전국체전 개최에 의한 투숙여건 마련을 위해서 해외바이어를 위한 숙박시설(특급호텔 75개 룸)과 상담장(700평)을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초청바이어에게 1박 2일간의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고, 공항과 호텔까지 왕복 임차 버스편(총 14대)과 체전기간 중 문화 및 체육행사의 관람을 위한 차량편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천하였다.

18) 참조 : 인천광역시 국제통상과 인천광역시의 해외수출확대 우수사례 : 대규모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국제교류지, 2000년 7월, p.34-37.

5. 월드컵 이벤트 활용

1) 2002년 월드컵 준비 : 이미지제고와 국제화 감각의 훈련장

2002년 치루어질 월드컵 축구대회는 우리 사회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동원해야 할 단기적 과제를 안겨주는 스포츠 행사이지만,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개최도시, 행정기관, 기업, 시민 등 모두가 연계하여 준비해야 할 지역활성화, 국제관계, 문화전파 등 다차원적 의미를 가진 지구촌 최대의 행사이다.

보통 국제 스포츠 행사가 보여주고 있는 기대효과들을 보면, 입장료 수입 및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이외에도 국제적인 대외 이미지를 높여주며,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킴으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준다. 또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경기장 등 도시기반의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는 거시적 효과도 가져온다. 따라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광 자원과 인프라의 충실한 준비와 정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시설만이 국제화 의식을 높여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의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개인의 국제화의식, 문화예절의식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의 함양에 자치단체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큰 행사를 계기로 국제적 공존의 원리를 배양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들의 대회준비 사업 이외에도 시민들의 대회참여와 친절한 손님맞이의 자세,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노력, 상거래 도의 등의 확립이 세계화 이미지의 최선이라고 하겠다¹⁹⁾.

2) 일본 상대 개최시와의 관계정립, 정보교환을 위한 협조관계 유지

서귀포시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 자치단체는 한일양국의 조직위원회 사무국간의 협력관계 이외에도, 고베시, 결승전이 벌어지는 사이타마 경기장, 이바라키현립 카시마 경기장, 외타 경기장, 시즈오카의 오가사야마 종합운동공원 경기장, 미야기

19) 김찬호, 2002월드컵, 지방의 국제화에 대한 도전, 국제교류, 2000년 6월, p.8-13.

경기장 등과의 협력관계,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을 도움받아야 할 것이다.

3) 민간자원의 최대활용

파리시 월드컵담당 특별부시장에 의하면, 마케팅, 행사기획, 축제준비 등에 민간부문의 창의력, 에너지, 인력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그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지원체제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리시는 전문민간회사가 모든 전문인력으로 행사기획력을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원, 각종 행사, 축제, 퍼레이드 등의 기획과 추진을 맡았으며, 시에서는 재정조달, 장소제공, 안전관리, 청소 등에만 전념하는 분담체제를 유지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와 같은 전문적인 분담체제가 좋을 것이다. 여기서 한번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월드컵 행사는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장이 되도록 자치단체, 지역기업인, 정치가, 시민들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시민들이 자원하여 무료 민박유치를 대대적으로 기획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평화의 섬 이미지를 한층 고양시킬 수 있는 시민모두의 단결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IV. 결 론

지방정부가 국제교류협력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발전 분야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환경에서 직접적인 지방정부의 통제 보다는 민관이 합동으로 협력하여 경제발전의 주체(stakeholders)가 되어 산업단지의 개발, 경제발전 집행기구의 운영, 기업 창업활동지원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면서도 자치단체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참여 국제기구의 카운터 파트너와 지속적인 연락과 사업에 관련한 대화를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항시 접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급작스런 상황변화에 무기력하지 않도록 예산 배분

에서의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벤트 등 국제교류활동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른 국가의 언어 및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그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진정한 세계화 의식이 가치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물, 관광장소 자체적인 가치보다는 그 이면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의 편리함, 지역특색의 전통문화 소개 등 주변의 한국적인 생활문화가치의 고양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러한 목표의 실천을 위한 제주 평화의 섬 전략이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4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류협력의 범위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의미를 넘어서서 안정 및 평화에 공헌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번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제주도 내 자치단체의 실천의지가 바로 현 자치법 상의 국제교류협력의 의미를 한 차원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신겸, 지역경제 새로운 싹이 자란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0년 8월.
- 독일 브레멘 선언, The Bremen Declaration : Business and Municipality-New Partnerships for the 21st Century.(참조 <http://www.bremen-initiative.de>)
- 고충석, 김부찬 외, 평화의 섬 지정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
- 채용식, 통일한반도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전략, 지방자치 경영연구, 1995, 제1권 제 1호, p.113-140.
- Jun Jong S. Wright Deil S., Glob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 Institutional contexts, policy issues,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6, p.404
- Iris Boinvilliers(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Paris, Editions du GRET, 1996, p.348